

출장복명서

문종철 (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)

<출장 개요>

1. 출장자: 문종철 (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)
2. 출장목적: 일본 경단련 산하 경제홍보센터 2015 Korean Think Tank Experts Invitation Program 참가
 - 일본의 정치·경제·사회 및 정치·경제·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 및 좌담·토론
 - 일본의 정·관계, 학계, 연구기관, 기업 관계자와의 면담
 - 글로벌 경제 속에서의 한국의 경제·산업·기업에 대한 주제 발표
3. 출장기간: 2015년 4월 12일(일) ~ 2015년 4월 18일(토), 6박 7일

날짜	장소	방문처 및 일정
4월 12일(일)	서울 - 도쿄	김포 출발, 하네다 도착
4월 13일(월) - 4월 17일(금)	도쿄	일본 경제홍보센터 2015 Korean Think Tank Experts Invitation Program 참가
4월 13일(월)		- 일본 경제홍보센터 - 니혼게이자이 신문 - 아사히 신문 -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
4월 14일(화)		- 참의원 -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- 도요대학 사회학부 - 재무성
4월 15일(수)		- 중의원 -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
4월 16일(목)		- 캐논 글로벌전략 연구소 - 아지노모토 - 국립 사회보장·인구문제 연구소
4월 17일(금)		- 일본종합연구소 - 주제발표
4월 18일(토)	도쿄 - 서울	하네다 출발, 김포 도착

4. 숙박정보

○ 4.12.(일) ~ 4.18(토) : 도쿄 6박

- 숙소명: Imperial Hotel

- 주소: 1-1-1 Uchisaiwai-cho, Chiyoda-ku, Tokyo 100-8558

5. 방문기관

○ 일본 경제홍보센터

- 담당자: 모토야마 아키라 (일본 경제홍보센터 국제홍보부 주임연구원)

- 연락처: +81-3-6741-0031

□ 4월 13일(월)

○ 니혼게이자이 신문

- 면담자: 지쓰 데쓰야 (니혼게이지신문 논설부위원장 겸 편집위원)
- 주제: 일본의 경제(Japanese Economy)

○ 아사히 신문

- 면담자: 미우라 도시아키 (아사히 신문 편집위원)
- 주제: 일본의 정치(Japanese Politics)

○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소

- 면담자: 후쿠다 신이치 (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)
- 주제: 오늘날의 일본경제 (Japanese Economy Today)

□ 4월 14일(화)

○ 참의원

- 면담자: 하쿠 신쿤 참의원 의원 (민주당)

○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

- 면담자: 호시로 히로유키 (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)
- 주제: 일본의 외교 (Japanese Diplomacy)

○ 도요대학 사회학부

- 면담자: 이자와 야스키 (도요대학 사회학부 교수)
- 주제: 일본 내의 한국인 (Korean In Japan)

○ 재무성

- 면담자: 나카야마 미쓰테루 (재무성 예산국 조사과 예산기획관)
- 주제: 일본의 재정정책 (Japanese Fiscal Policies)

□ 4월 15일 (수)

○ 참의원

- 면담자: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원 (자유민주당)

○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

- 면담자: 박상준 (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)
- 주제: 한·중·일 경제관계 (Korea-Japan-China Economic Relationship)

□ 4월 16일 (목)

○ 캐논 글로벌전략 연구소

- 면담자: 유하라 데쓰오 (캐논 글로벌전략 연구소 이사)
- 주제: 일본의 에너지 정책 (Japanese Energy Policy)

○ 아지노모토

- 면담자: 다카하시 겐자부로 (아지노모토 이사, 홍보부장)
가네코 게이지 (아지노모토 식품사업본부 해외식품부 해외감찰
맛조미료그룹장)
- 주제: 아지노모토의 세계 전략 (Ajinomoto's Global Strategy)

○ 국립사회보장·인구문제 연구소

- 면담자: 고지마 가쓰히사(국립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 제2
실장)
- 주제: 일본의 사회 (Japanese Society)

□ 4월 17일 (금)

○ 일본종합연구소

- 면담자: 다나카 히토시 (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)
- 주제: 한-일관계 (Korea-Japan Relationship)

<면담내용>

4월 13일 (월)

I. 일본의 경제 (Japanese Economy)

□ 면담자: 지쓰 데쓰야 (니혼게이자이 신문 논설부위원장 겸 편집위원)

□ 면담 내용

1. 전후 경제 70년의 요약

○ 전후 경제 70년의 시대구분

- 50~70년대 초 고도성장
- 70년대 두 가지 쇼크: 닉슨 쇼크, 석유 파동
- 80년대 : 미 일 경제마찰
- 80년대 후반~90년대 초반: 버블 경제
- 90년대 이후 : 버블 붕괴, 잃어버린 20년
- 그 이후: 아베노믹스 대두

○ 1950년대

- 1955년에 전쟁 전 경제수준 회복
- 국민들 사이에 “전쟁 직후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” 는 의식이 확산
- 그러나 생활수준은 아직 낮은 편

○ 1960년대

1) 이케다 수상 주도의 소득 배증 계획

- 평균 10%의 성장률로 10년 간 소득을 2배로 올린다는 계획 목표를 7년 만에 달성
- 정책적으로는 지방, 중소기업,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

- 의료보험, 연금의 시작

2)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조건

- 기초교육을 이수한 노동력
 - i) 지방에서 도시로,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인구가 이동
 - ii) ‘황금의 알’ 세대: 1950년대 14세~19세 인구가 전체의 35%를 차지 (현재는 약 12% 수준)
 - iii) GDP가 1년에 1% 꼴로 성장
- 고정환율
 - i) 엔-달러 환율이 1달러당 360엔 수준에 유지
 - ii) 수출 경쟁력 확보
- 신흥국에 대한 미국의 관대한 태도
 - : 정세적으로 유리

⇒ 이 시기에 소니, 혼다, 교세라 등이 전쟁 후의 벤처기업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에 활력으로 연결.

3) 공공부문의 역할

- 공공부문은 산업재편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견인
- 그러나 고도성장은 공공부문만이 주도한 것은 아님

4) 1964년 올림픽을 거쳐 1968년에는 국민총생산 세계 2위로 상승
: 국민들에게 자신감 확보

○ 1970년대

1) 닉슨쇼크

- 1달러당 360엔 고정환율에서 1973년 변동환율로 이행 → 엔고 현상으로 연결
- 1975년 1달러당 175엔까지 상승
 - : 수출기업 도산 우려 확산

2) 석유파동

- 1차 석유파동: 제4차 중동전쟁의 결과 OPEC의 감산
2차 석유파동: 1978~1979 이란 혁명
-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1974년의 물가상승률 23%를 기록
: 1999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 → 고도성장기의 마무리
- 일본은 예상보다 석유파동을 빨리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
: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, 자동차 고연비화 등과 관련한 기술 획득.

○ 1970~90년대 미-일 마찰시대

1) 배경: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

- 특히 80년대의 무역수지가 원인
-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970년대부터 상승 경향을 보이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는 흑자규모가 대폭 상승.

2) 1970년대 닉슨쇼크와 석유파동이라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

- 섬유, 철강, 컬러TV의 수출이 견실한 상승세를 유지
⇒ 수출 자율규제 수용 불가피 (자료 1 참조)
- 1972년 철강을 시작으로 1977년 컬러TV 등이 수출 자율규제를 받음

3) 마찰 2단계: 개별 상품의 수출 호조 +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초점

- 1988년 쇠고기와 오렌지가 결국 개방
- 1991년 반도체: 일본시장에서 외국계 반도체 점유율 20% 이상이라는 수치목표를 설정
- 1982 덤핑 규제, 국내 시장자율규제 확대
-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식은 여전히 불충분
: 보복관세와 슈퍼 301조 의결로 대응.

4) 3차 초점: 일본경제의 체질 변화 ⇒ 일본이 여러 가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

- 공공부문투자
- 계열 중시의 관습 타파
- 금융, 자동차부품 등의 시장접근성 확대
- FDI 개방

○ 1990년대 이후: 진정화

1) 2000년대에는 80년대의 이슈가 거의 문제화되지 않음

- 자동차 등은 일본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형태에서 현지 생산으로 전환
- 일본경제의 거품 붕괴
-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옴
대중 무역적자 > 대일 무역적자

2) 한 때는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미국의 사회 경제, 개별 기업의 반발 등이 있었으며 일본 자본의 부동산 매입 등 확대로 ‘일본 위협론’이 확산되었으나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시장의 폐쇄성, 특히 계열사 내부거래 및 수입 억제관행 등이 미국의 압력 등의 영향으로 많이 없어짐
: 현재의 일본은 완전한 자유무역 국가

2. Bubble의 생성과 붕괴

○ 버블 붕괴의 촉발: 플라자 합의 (1985년 9월)

- 마찰 관계 때문에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엔-달러 환율을 낮춤.
→ 3년 만에 엔화가 2배 평가절상
- 정치·경제적으로 불경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재정 완화 정책을 사용하여 기업이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불충분.

○ 버블의 생성

- 1980년대 중반 자산가격 거품으로 자산가가 5배나 상승
- 자본시장 버블, 금리 자율화, 은행 간의 경쟁 등이 겹쳐 은행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 이탈과 부동산 집중 현상이 나타남.
-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융자제안이 나타나고 부동산 개발 계획이 활성화
 - 도쿄의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옴

○ 버블붕괴와 뒤늦은 대응

- 1987년에 금리를 5%에서 2.5%로 인하
- 미국 주식이 25% 폭락 : 미국,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은 없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
- 결국 90년대에 금리인상, 부동산융자 규제, 지가세 등을 도입했으나 이미 늦었음.
 - : 무리한 융자는 지가상승을 불렀고,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히 과격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순식간에 거품이 소멸하고 장기 불황에 도입
- 버블을 방치해두는 것과 터트리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, 너무 큰 버블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시기의 교훈이었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.
 - * 미국의 subprime mortgage도 이와 비슷한 거품 현상으로 결국은 붕괴

3. 잃어버린 20년 (1992~2013)

○ 재무제표 불황

- 은행은 기존 불량채권 처리에 쫓겨 새로운 융자를 할 여력이 없음
 - 적자가 불가피
- 은행은 도산을 막기 위해 불량채권의 존재를 은폐했고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침
 - : 결국 실적이 나쁜 은행은 파산하고, 그렇지 않은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 은행 문제 해결에 10년이 걸림
- 2004년에 가서야 불량채권 처리가 완료
 - : 결국 1990년대는 문제해결을 자꾸 뒤로만 미루던 시기
-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도 구조조정을 게을리 함.

- 기업생산 증가와 엔화가치 하락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안심을 하던 와중에 리먼 쇼크와 동일본지진이 발생

○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

- 엔화가치가 상승: 달러당 120엔 → 75엔
- 주가 하락

○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구조적 변화

1) 고령화

- 잠재성장률이 저하
- 생산가능 인구가 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짐
: 2030~2050년 사이에 생산가능 인구 38% 감소 예상
- 경제성장은 줄어들고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

2) 경직된 경제구조

- 문제요인
 - i) 유동성과 인력의 이동성 저하
 - ii) 기업문화 및 고용관행의 변화가 없음
- 결과로 1인당 GDP가 잃어버린 20년 초기 OECD 회원국 중 8위에서 17위로 하락

4. 아베노믹스

○ 아베노믹스의 지속 당위성 여부

- 아베의 기본 생각
 - i) 경기침체의 모든 원인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
 - ii) 금융뿐만 아니라 재정에서도 팽창정책을 사용

-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의 평가
 - i)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 금융 정책
 - ii) 그 동안 신중한 태도로 일관한 일본은행에 regime change를 가져옴.
- 2년동안 2%의 물가상승 목표
 - i) 인플레이션은 임금인상을 동반하고 노사 관계에 압력을 가함
 - ii) 기업은 사외이사제 도입 등 corporate governance에 변화를 가져옴

○ 평가

- 그 동안의 엔고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는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으로 안전 통화 수요에 따른 이상평가절상으로 보고 있음
 - : 과거 일본은행의 개입을 미국이 비판한 적이 있어 더욱 소극적으로 움직임
- 금융완화를 통한 시장의 압력이 기업수익으로 연결
- 재정정책
 - : 일시적 효과만 가져왔을 뿐 근본적인 재생정책은 안 됨.
- 기업들의 역량강화(경영환경 개선, 규제완화 등), 지방자립 촉진 등이 동반되어야 함.

5. 일본경제의 과제

○ 재정 건전성 회복

- GDP 대비 순부채(= 부채 - 자산)의 비율이 142.5%
- 재정 건전성 회복은 정부도 강조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음.

○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책

-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
- 외국 인력 유입
- 사회보장 체계의 개편

○ 지방 경제 활성화

- 지방 정부의 자율성 확대
-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현재 일본의 재정상황 때문에 어려움
: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이 해답이 될 수 있음.

○ 국제경쟁력 강화

- FDI 유치 확대
- 경영비용 절감
- 기업가 정신 육성
- 숙련 노동력 육성을 동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

II. 일본의 정치 (Japanese Politics)

□ 면담자: 미우라 도시아키 (아사히신문 편집위원)

□ 면담내용

1. 역사적 배경

○ 종전 70주년의 의미

1) 2015년은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해

- 일본에서는 정치를 논할 때, 전후 ○년 식으로 연수를 셈.
: 그만큼 2차대전이 일본 정치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
- 왜 2차대전 종전을 기준으로 역사를 논하는가
 - i) 2차대전 후로는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못함
 - ii) 일본제국 붕괴, 식민지 상실, 군대 해산 등으로 국가가 재탄생
→ 2차대전 패전은 타국의 독립에 준하는 원점의 역할

○ 전후의 역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

-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는 평가와 강요된 평화주의의 시대였다는 평가
- 강요된 평화주의의 시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후 regime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
- 헌법과 국기에 대한 상반된 태도
: 보수주의자는 헌법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기는 신성시, 자유주의자는 헌법은 지켜야하지만 국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

⇒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지속 중

2. 1955체제

○ 고도 경제성장 하에서 보수와 사회주의 세력이 공존

- 이 시기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기 보다는 친소련에 가까운 행태로 이에 대항하는 보수의 보루로서 자유민주당이 발족
: 냉전 상황의 투영
- 그러나 일본 사회당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자민당의 견제역할에 더 중점

○ 38년간 자민당 1당 체제

- 보수 장기집권
 - i) 고도성장의 전제가 되는 정치의 틀 고정
 - ii) 사회당은 명목상 제2당이였으나 실제로는 자민당의 독주
⇒ 이 시기 일본의 정치체제를 한마디로 정리
- 이 시기 일본정치의 2가지 특징
 - i) 중선거구 기반
 - 보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민당의 파벌 정치
 - 정치자금도 파벌 단위로 수수
 - 파벌이 당내 당의 역할을 함
 - ii) 관료우위의 정치
 - 대장성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
 - 정치가는 관료에게 의지하고 관료를 정치를 이용함으로써 정치의 과실을 나눠먹는 구조

3. 1990년대의 격변

○ 정치개혁

1) 1955년 체제의 종말

-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, 소련 붕괴 등으로 냉전 종식되면서 사회주의화에 대한 우려 소멸
- 자민당의 선거 패배로 연결
: 그동안 정치, 관료, 경제계가 유착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에 대한 심판

2) 자민당 패배 이후 파벌중심 정치에 변화

- 과거에는 수상의 지위가 약해서 선거패배, 정책실패, 스캔들 등으로 수상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다반사.
- 자민당 패배 이후 정당강령과 수상을 내세우는 정당본위의 정치모델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모델(Westminster model)이 주류가 됨
- 여기에 정치 보조금법이 도입되면서 당수의 권력이 상승하고 정당파벌의 힘이 약해지는 정당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짐
⇒ 과거에 비해 수상교체의 빈도 감소

○ 국제화

1) 1990년대 까지 경제성장의 과실을 배분하는 체제가 종식되고 고통을 나누는 체제로 이행

- 그러나 정치가들은 고통분담에 대한 언급을 꺼림
- 대신 돌파구로서 nationalism이 대두

2) 국제화 진전

- 정보통합으로 개별 국가단위의 유효한 정책의 수행이 불가능
- 그러나 정치체제는 여전히 국가단위의 폐쇄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서 괴리 발생
: 세계화와 1국 단위 정치체제의 괴리는 고이즈미 정부의 특성

○ 인기영합주의 대두

1) 정치가 수상의 리더십에 의존

- 수상은 국민과 직접 대화를 시도
- 의원내각제이지만 대통령적 체제로 변화
: 민주당 정권, 아베 정권으로 계승

2) 선거독재 체제

- 선거에 이기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무소불위 의식 대두
- 이러한 의식은 민주당 체제에서부터 시작
 - : 민주당부터 nationalism을 활용
- 민주당 정부의 실패가 아베 정권으로의 이행 계기
 - : 민주당과 아베는 비슷한 정치스타일

3) 인기영합주의 대두 배경

- 유권자의 균질화
- 노동조합, 직능단체, 협동조합, 업계 등의 중간 조직의 약체화
- 지역, 사회계층, 종교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 부재
 - ⇒ 정치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
-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대할만한 요소가 지방이 중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방분권체제

4. 아베 정권

○ 아베정권의 탄생

- 배경: 동일본 대지진과 중국의 대두

1) 지진대응 실패

- 원자력 발전은 자민당이 추진했으나 실패의 책임은 민주당이 진 형태
- 대지진으로 권위가 실추되고 권위를 가볍게 보는 태도가 만연

2) 중국의 대두

- 일본의 경제침체와 영토문제는 전후 일본의 평화의식을 근간부터 흔들어 놓음
- 대외적으로 보다 강력한 태도를 보이는 정권을 요구

○ 아베 정권의 향방

1) 아베는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?

- 우경화의 정의에 따라 다름
- 우파 정치인의 대두라는 측면에서는 맞음
- 그러나 국민의식 상으로는 과거와의 차이
 - :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의 내용을 인정하고 평화헌법의 체제를 지지

2) 그러나 한-중과의 문제에서 의식의 변화가 감지

- 한-중에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한-중에의 반발 확대
-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베 정권의 시도를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 아님
 - : 선거에서 나온 자민당에 대한 지지는 자민당 정권을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뿐임.

○ 아베정부의 속사정

1) 아베정권의 두가지 얼굴

- 아베의 지지세력과 관련
 - : 아베 본인의 얼굴과 아베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조직의 얼굴이 있음
- 아베의 지지세력은 아베정권의 정책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음
 - : 특히 잘 진행되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비교하면 쉽게 파악 가능

2) 아베 정권의 정책우선순위

- 아베정권 하에서 잘 진행되는 정책
 - i) 원전을 비롯한 경제, 산업관련 정책
 - ii) 안보정책
- 아베정권 하에서 지지부진한 정책
 - i) 소비세 인상
 - ii) 사회보장 확대

○ 아베정권의 우선순위

- 아베정권은 이념주의자인가 아니면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는 실리주의자인가?
- 현 정권의 버팀목은 주가와 지지율
: 만약 저 두 가지가 하강국면에 들어갈 때 내셔널리즘 카드를 빼들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
- 정치자본의 이용문제
 - i) 정치자본이란 바라는 정책을 행동에 옮기는 힘을 의미
 - ii) 정치자본의 이용문제는 아베정권이 정치자본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
 - iii) 정치자본이란 안 쓰면 줄고 잘 쓰면 늘어날 수 있는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아베는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
- 2차대전 전과 현재의 비교
 - i) 2차대전 전은 팽창하는 power, 현재는 쇠퇴하는 power라는 차이가 있음.
 - ii) 쇠퇴하는 power의 nationalism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.
- 앞으로 미-중과의 관계가 아베정권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음
: 미-중 관계의 흐름에서 정치·사회적인 흐름의 변화에 따라 아베정권의 장기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.

III. 일본의 현대경제 (Japanese Economy Today)

□ 면담자: 후쿠다 신이치 (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)

□ 면담내용

1. 잃어버린 20년의 시작: 버블의 붕괴

○ 고도 성장기의 일본경제

- 1950~6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동안 일본 경제는 연 20%의 성장을 기록
- 고도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종지부
: 그러나 그 시기에도 연 4~5%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
- 이러한 성장추세는 1980년대 전반까지 지속

○ 1980년대 거품의 형성

- 1980년대에 들어와서 주가와 지가가 이상 급등현상을 보임
- 주가
: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가와 GDP가 비슷한 행보를 보이다 1980년대 후반이후에는 주가 상승률이 GDP 상승률을 추월
- 지가
 - i) 지방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지가가 폭등 현상을 보임.
 - ii) 지가는 주가만큼 폭등하지는 않았지만 하락속도는 더욱 느려서 주가 하락보다 더 악영향을 미침.
- 버블의 문제
: 버블의 본질적인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.

○ 버블형성의 원인

1) 거시경제 지표에의 과신

- 1970년대 석유파동,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이들 충격이 가져

을 악영향을 걱정한 것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
→ 거시경제에 대한 과신으로 연결

2) 금융자유화

- 금융자유화 자체는 경제발전에 불가피하나 감시가 불충분
- 부동산 대상 은행융자의 증가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
기는 분위기가 팽배

3) 확장적 금융완화와 물가안정의 지속

- 1980년대까지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차입에 의존
- 그러나 금융자유화 이후 우량한 기업이 은행융자 외에 주식, 회사채, CP
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
: 제조업의 은행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은행은 새로운 대출선을 확보해야
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 돌파구로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융자가
증가
- 결과적으로 지가가 폭락하면서 부동산에의 대출이 불량채권화
-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고 주가와 지가가 꾸준하게
상승하면서 물가가 안정
: 주가와 지가폭등에 대한 경계감은 있었으나 안정된 물가를 배경으로
엔고 현상의 시정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확장정책을 취함
→ 버블 생성

⇒ 1990년대 버블이 붕괴하면서 20년 간 회복되지 않는 사태에 이름

○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경제

- 1970~80년대의 일본은 연 평균 4.5%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선진국 중에서
가장 돌출될 성장세를 보임
: 1979년 “Japan as No.1” 의 출간과 더불어 일본의 performance를 주
목하기 시작
- 1990~2000년대의 일본의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저조
: 일본의 실패에 관심

2. 잃어버린 20년의 원인

○ 경제당사자들의 늦은 대응

- 버블 붕괴도 문제지만 늦은 대응이 더 문제
- 버블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의 버블에 대한 대응은 매우 늦었음
 - : 90년대 초에 버블은 붕괴했지만 불량채권은 2001년까지 증가.
- 늦은 대응의 원인
 - i) 버블 붕괴 후 5년간 낙관론이 지배
 - : 지가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량채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오히려 증가.
 - ii) 지가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응을 늦추고 결국 1997~98년 금융위기가 와서야 심각성을 깨달음

⇒ 즉, 일본의 금융정책은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대응에 나서는 등 뒤늦은 대응이 문제였음.

○ 모순현상 발생: 신용경색(credit crunch)

- 유망기업에의 대출이 줄고 비유망기업에의 대출은 증가
- 단기 관측에서의 대출태도(lending attitude) 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 말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가 버블붕괴, 1990년대 말 금융위기, 2000년대 중반 IT 버블 붕괴, 리먼 쇼크 등을 거치면서 대출에서의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배
- 그 중에서도 특히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시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심했으며 이때는 유망기업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경색(credit crunch) 현상이 나타남.
- 그러나 비제조업, 부동산 관련 대출은 증가했고 좀비기업에의 대출도 버블 붕괴 후 계속

⇒ 결국 문제를 방치하고 뒤로 미룬 것이 잃어버린 10년의 원인.

○ 또한번의 잃어버린 10년

- 2000년대 들어와서 불량채권의 처리가 거의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음
 - i)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동안 불량채권 처리만 잘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 → 은행기관의 건전성 강화가 강조
 - ii) 그러나 결과는 deflation 경제
- 그 이유는 불량채권의 처리가 생산성 향상이 아닌 cost cut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
 - i) 특히 그 중에서 임금하락을 통한 cost cut이 큰 비중을 차지
 - ii) 그 결과 물가와 임금수준이 정체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물가, 임금의 절대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이룸.

3. 아베정권의 탄생과 경제정책

○ 아베정권의 경제정책

- 노다 총리의 사임과 총선을 통하여 아베정권이 탄생
 - : 아베 정권 이전까지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
 - 타개책이 필요
- 아베정권은 그 이전과는 다른 대담한 금융정책을 선언.
- 아베정권의 경제회생정책은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로 비유됨.
 - i) 첫 번째 화살: 파격적 금융정책
 - ii) 두 번째 화살: 확장 재정
 - iii) 세 번째 화살: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전략
- 1단계인 파격적 금융정책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.
 - i) 2년동안 목표치인 2%의 인플레이션을 달성
 - ii) 아베 정권 이전에는 타국에 비해 통화 공급이 적었으나 이후에는 통화 공급 증가.
 - : GDP 대비로는 미국-유럽보다 양적 완화가 더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둠.

○ 아베노믹스의 효과

1) 금융 지수 등에서 기대 선행효과 발생

- 특히 환율 증가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남
: 환율과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.
- 그러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경제호전과 직접 연결 되는 것은 아님

2)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소비자 심리는 다시 위축

- 그 이유는 주가 상승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만 이익을 보고 임금 소득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소비세가 인상되었기 때문
- 따라서 소비자 심리는 위축

3) 경기는 호전되지 않는데 주가만 오르는 이유

-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
: 특히 2014년 이전의 아베노믹스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유입이 두드러짐
- 그러나 2014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의 유입은 진정화되고 최근의 주가는 신탁은행과 국민연금펀드 등 공적 기관이 주도

○ 아베노믹스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

1) 물가

- 2014년 이후 소비세 2% 증가분을 생각하면 결국 제자리
- 이는 원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0%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표치에는 못 미침.

2) 생산수준

- 리먼 쇼크 당시에는 수출감소가 생산감소로 이어짐
- 동일본 대지진 시에는 국내생산능력 자체가 감소
-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아베노믹스 이후 생산은 상당수준 회복된 것으로 보임

- : 아베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리먼 쇼크 이전의 생산수준은 회복하지 못함.

3) 노동시장

- 주가를 제외하면 가장 활성화된 부분
- 그러나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
 - :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변함이 없음.
- 임금의 경우 아베노믹스 이후 잔업 수당 등으로 성과급은 늘어났지만 기본급은 여전히 정체

4) 은행 대출환경

- 여전히 어려운 상황
- 그 이유는 주가 상승분의 일부가 예금으로 전환되고 지진복구보조금도 예금으로 몰려서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출금리의 하락세가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추측

5) 수출

- 아베노믹스 이후 무역수지 악화
 - 수입 면에서는 원전 정지 이후 에너지 수입의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
 - 수출은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정체
- 수출이 부진한 이유
 -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업이익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
 - 해외현지 생산의 증가로 수출의 감소: 가장 유력한 가설
 - 일본 제품의 경쟁력 감소
- 수입 증가 이유
 -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계류 수입이 증가
 -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수입이 증가

6) GDP

- : 주가는 상승하지만 GDP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

○ 문제의 해결방안

- 3번째 화살의 제대로 된 활용.
 - : 즉, 제대로 된 성장전략의 구축
 -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됨
- 구조 개혁의 10대 테마
 - 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보유 현금의 투자로의 전환
 - ② 공적자금의 적극운용
 - ③ 벤처기업의 활성화
 - ④ 법인세 인하
 - ⑤ 기술혁신
 - 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
 - ⑦ 유연 근무시간제
 - ⑧ 외국인력 특히 숙련 노동력의 수입 확대
 - :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인력은 비숙련노동력 위주
 - ⑨ 농업개혁 정책을 통한 수출 가능 농업으로의 전환
 - ⑩ 의료 산업, 관광 등 고품질 서비스 산업 진흥
-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지 못함
 - i) 근본적인 문제로는 ①저출산과 baby boom 세대 은퇴에 따른 고령화의 급속도 진행, ② 재정적자 문제 등이 있음
 - ii)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

⇒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확대 추세에 수술이 필요.

4월 14일 (화)

I. 일본 정치인과의 대화 (1)

면담자: 하쿠 신쿤 (참의원 의원, 민주당, 전 조선일보 일본지사장)

면담내용

- 면담자의 off-the-record 요청에 의하여 면담내용 생략.

II. 일본의 외교 (Japanese Diplomacy)

□ 면담자: 호시로 히로시(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)

□ 면담 내용

1. 일본 외교의 기본 패턴

1) 외압의 영향

- 반응 국가(reactive state): 스스로 생각하는 외교가 아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가
- 반응 국가로서의 일본외교의 사례
 - i) 수출 자율규제
 - ii) 걸프전: 미국으로부터 돈은 보내지만 사람은 보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 → PKO활동으로 연결
 - iii) 공적원조 (예) KEDO관련 원조

2) 소수에 의한 외교의 결정

- 표가 되지 않는 외교 분야에의 젊은 세대 정치인의 참여 부족
: 의원들의 분야가 농업, 건설에만 집중 ⇒ 젊은 외교전문가가 육성되지 않음.
- 외교는 상층부만이 결정
⇒ 수상이 장관을 지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

3) 농업분야의 영향

- 가장 중요한 득표원천으로서 외교 문제에도 영향력 발휘
: 농협이 자민당의 주요 후원자
- 2000년 이후에 영향력이 증가
 - i) FTA 협상의 걸림돌
 - ii) 통상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곡류, 육류, 유제품, 설탕 및 감자류 등 5가지의 품목에 대하여 보호를 고집하게 함

- 농업분야의 영향력이 높은 이유

i) 비교우위의 문제

: 자유무역 체제하에서는 비교우위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. 따라서 일본에서는 농업의 수익률이 낮는데 이 때문에 농민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음

ii) 노동력의 경직성

: 대부분의 농업 종사자는 비숙련노동력으로서 다른 분야로의 전직이 어려움

iii) 조직화의 용이성

: 농업 종사자는 소수라서 조직화가 용이하고 집단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쉬움

- 수출자유규제시대 이후 통상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

: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대립하는 일은 많지 않음. 현재는 외교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대립

⇒ 이러한 농업종사자들이 자유무역체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농업의 시장개방이 어려움

2. 주권회복 후의 외교

1) 주권 회복 이후의 외교과제: 국교 정상화 (1950 ~ 60년대)

- 국교가 없는 나라와의 외교 정상화

- 하토야마 수상의 소련과의 국교 수립(1952), 다나카 수상의 중국과의 국교 수립(1972) 등 총리가 자신의 사명으로 대형 외교정책을 추진

- 한-일 국교 정상화(1965)

- 동남아 지역과의 외교 수립: 버마(1954), 인도네시아(1958) 등

2) 미-일 안전보장조약: 안보를 미국에 의존

○ 요시다 독트린

- 미-일 안전보장 조약체결과 (상대적) 경무장
- 국방비 지출을 GDP의 약 1% 이하로 제도적으로 억제
 - : 방위비 절대액 수치 기준으로 일본이 세계 9위, 대한민국이 세계 10위

○ 미-일 안전보장 조약의 문제

- 근본 문제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에 있음.
 - : 1948년 밴덴버그 결의(Vandenberg Resolution)에 의하여 일본은 미국을 방위해줄 수 없으므로 상호 방위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불평등해도 상관 없는 조약이 됨.
- 불평등 조약으로서의 특징
 - ① 미국은 일본의 방위에 대한 의무가 없음
 - ② 상황에 따라 미군은 언제든지 일본 영토에 대해서 철수 가능
 - : 일본은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음
 - ③ 조약의 유효기간이 없음
 - : 불평등 상태의 지속
- 1960년 기시 수상에 의해서 개정

3) 영토분쟁

- 오키나와 반환(1972): 사토 수상의 주도
-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
 - i) 쿠릴 열도/북방영토 문제 (대 러시아)
 - : 소련과 국교 정상화 시 북방 4도 중 2개 섬의 반환을 요구하고 소련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소련과 국교 정상화를 담당하던 고노 이치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무시
 - ii) 독도 문제 (대 한국)
 - iii) 센카쿠 열도 문제 (대 중국)

4) 경제회복 및 성장

-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지불
- 그 후 수출과 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적원조(ODA)를 활용
 - : 회귀분석 결과 ODA와 수출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3. 2000년대 이후의 외교

○ 외압: 여전히 존재

○ 외교정책의 권력중심 이동

1) 외교정책의 결정주체가 외무성으로부터 내각관방으로 이동

2) 이동의 원인

- 2001 ~ 2002년에 발각된 외무성 공무원의 외교정책비 착복, 유용사건
: 다나카 의원과 외교부의 갈등에 더해서 외무성의 신뢰도를 실추시킴
- 2001년 중앙부처 개혁에 의해 내각부에 권력이 집중
- 2014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: 외교정책 입안·수립에 개입

○ 집단적 자위권

1)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

- UN 헌장 51조
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어날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취할 때까지 현재의 헌장에서 그 어떤 것도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제약할 수 없다.
- 일본헌법 9조
 - i) 일본의 헌법 9조 1항에 의하면 일본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무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천명.
: 따라서 일본은 자기 방어 수단이 없음
 - ii) 그러나 제2항이 문제
: 2항에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가지지 않을 것을 규정. 원래는 ‘1항을 달성하기 위해’ 라는 구문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아시다 수정(Ashida revision)을 통해서 ‘1항을 달성하기 위해’ 라는 구문이 삽입.
 - iii) 2항의 ‘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’ 라는 구절에 해석을 덧붙여서

국제분쟁 해결이 아닌 자위를 위해서는 (자위대라는 이름으로) 군대 보유가 가능하다고 해석

→ 후에 자위의 범위를 집단적 자위권까지 확대

2) 집단 안전보장

- UN의 회원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이 모두 보복에 나섬
- 그러나 이러한 집단 안보 기능은 6.25 전쟁을 제외하면 거의 기능하지 않음
: 왜냐하면 냉전 시대에는 UN 내에서 회원국끼리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

3) 집단적 자위권

-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보복에 참여하는 체제
- 과거의 정권 하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되었으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았음
: 현재의 아베 정권 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
- 그러나 안보조약 체결이 집단적 자위권 발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판단

4) 헌법 개정의 문제

- 헌법을 개정하려면 ①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② 국민투표를 통해서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
- 특히 ①의 조건이 통과하기 매우 어려움
: 실제로 60년 동안 헌법은 수정된 적이 없음

○ 농업단체의 영향력 축소

1) 영향력 축소의 시작: 2009년 민주당의 승리

- 노조와 도시 지역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
- 여기에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층인 농촌지역의 지지율 하락

- 자민당 복권 후에도 전통적인 지지층의 자민당 지지율 하락추세는 계속
- 농촌과 농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민당의 세력 축소에 의해 농업단체의 영향력도 같이 축소

2) 농협 조직의 약화

- 아베의 농업 개혁
 - : 농협 전국 조합의 지역 농협에 대한 감독권 폐기로 농협조직의 약화
-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
 - : 자민당을 지지하는 표의 비율이 축소

○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동반자협정의 증가

- 2001년 일본-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멕시코, 말레이시아, 칠레,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스위스, 베트남, 인도 등 12개국, 1개 경제공동체(ASEAN)와의 협상 타결
- 2010년까지는 FTA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음
 - : 민주당 정권은 지지기반인 노조가 반대하는 정책을 펴지 않음
- 자민당 복권 이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활발해짐.
 - : 2014년 현재 11개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와 자유무역협정 혹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진행 중
- 현재 협상 중인 상대 국가 중에서 호주와 한국과의 협상이 난항
 - : 호주의 경우는 유제품 개방, 한국은 한국 자체의 사정이 문제

III. 일본 내의 한국인(Korean in Japan)

□ 면담자: 이자와 야스키(도요대학 사회학부 교수)

□ 면담내용

1. 재일 Korean

○ 재일 Korean의 성장 특성

- 중 1, 2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생활
- 중 3 때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킴
- 고 1, 2 때 다시 안정된 생활을 보내다가 고 3 때 생활이 거칠어지게 됨

⇒ 즉 인생의 중요국면에서 부딪히는 벽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짐
: 소수자 자녀들의 특징

○ 차별 문제의 인식

- 같은 처지에 있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차별받는 재일 Korean, 부락민, 장애인들과의 만남이 계기
- 자신이 겪은 문제가 재일 Korean의 문제가 아닌 차별의 문제로 인식

○ New Comer vs Old Comer

1) New Comer와 Old Comer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다름

2) Old Comer

- 비자발적 이민(involuntary immigrant)
: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서 강제연행된 사람들의 자손
- 1930년대까지의 이민은 사람들의 자손
: 1942년 이후에 연행된 사람들은 한국으로 강제 귀환
- 일본에 대한 서운함

- : 일본에 대해 ‘한’ 을 가지고 있음
- 1945년 8월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수는 약 240만~280만으로 추정됨
- : 그 중 이미 한국에서 기반을 잃어서 일본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약 65만명이고 그들과 자손이 재일 Korean을 형성

3) New Comer

- 자발적 이민(voluntary immigrant)
 - : 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
- 중국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involuntary immigrant 중에서도 대만출신인가 중국출신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.
 - 대만 출신: Old Comer와 비슷한 태도
 - 중국 출신: New Comer와 비슷한 태도
- 따라서 New Comer와 중국출신 중국계이민은 벤처기업 등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함

2. 재일 Korean의 인구 및 국적

○ 재일 Korean의 국적 구성

- 80%가 한국적, 20%가 조선적, 그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귀화한 사람들
- 조선적이라고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
- 과거에는 조선적에서 한국국적 취득을 거쳐 일본국적을 취득했으나 현재는 조선적에서 바로 일본국적을 취득

○ 일본거주 외국인 중에서의 재일 Korean의 비중

- 1989년에는 일본 거주 외국인의 80%가 재일 Korean
- 그 후로는 감소추세에 있음
 - : 2007년 이후 중국국적자가 재일 Korean의 숫자를 추월
- 감소의 원인은 재일 Korean 자체의 감소
 - i) 재일 Korean 1세의 사망

ii)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률이 감소

: 특히 과거에는 아버지의 국적이 신생아의 국적을 결정하던 국적법이 개정되어 신생아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이 감소 ← 여기에는 재일 Korean의 95%가 일본인과 결혼하는 현실이 반영

iii) 귀화

○ 영주권자 내에서의 재일 Korean의 비중

- 특별영주자의 95%는 재일 Korean
- 1990년대 중반 5년 시한부로 법안이 수립되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이 부여

○ New comer의 증가와 old comer의 감소

- 2014년 현재 new comer의 숫자는 약 14만 명 정도로 추정
- 전반적인 재일 Korean 숫자의 감소 속에서 old comer의 감소가 두드러짐

3. 일본 내 소수자로서의 재일 Korean

○ 여전한 차별의 존재

- 취업, 결혼,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경험
- 외국인 중에서도 구미계 외국인에게는 호의적인 반면 아시아·아프리카계에는 호감도가 낮음
- 특히 결혼에서 차별은 치명적
 - i) 외국인 여부가 일본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결혼
 - ii) 아시아·아프리카계의 경우는 결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

○ 다문화 경향의 반영

- 과거에는 일본국적 취득 조건으로 일본식 이름으로의 개명이 의무화

- : 현재에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일본국적 취득이 가능
- 과거에는 일본국적 신청 시 집안 모양의 사진 제출 의무화
 - : 집안에 고유문화의 분위기가 있거나 일본분위기가 없으면 감점요인
- 현재에는 그와 같은 제약조건 철폐
 - ← 일본 사회 자체의 다민족, 다문화화를 반영

4. 재일 Korean의 정체성

○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

- 완전한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등의 노력을 해도 한국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거나 공산주의자 취급을 받음
 - : 현실에 실망하고 일본으로의 귀화를 선택
- 그러나 경계인으로서의 장점도 있음
 - :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요구하는 업종에 특화

○ 재일 Korean의 진로 특성

- 1970년대까지는 대졸자도 취업이 곤란하여 자기 집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음
- 따라서 과거에는 의사, 변호사, 연구자 등의 직업을 추구
 - : 이들 직업의 공통점은 빠른 시기에 국적차별을 철폐하고 실력이 최우선시 되는 직업이라는 특성
-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국적차별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국적을 띤 사람들은 취업에 어려움이 감소
- 재일 한국인의 경우 F-4 비자를 통하여 한국에서 제약 없이 활동이 가능해짐.

IV. 일본의 재정정책 (Japanese Fiscal Policy)

□ 면담자: 나카야마 미쓰테루 (재무성 예산국 조사과 예산기획관)

□ 면담 내용

1. 일본의 재정구조

1) 일본의 예산구조

○ 한국과 일본의 예산구조의 차이

- 한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통합예산
- 일본은 일반예산만 있음

○ 일본의 예산 규모

- 96조 3000억 엔
- 그 중의 4분의 1이 국채임

2) 일본의 재정구조의 특징

○ 세출규모: 10조

-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비중이 높은 편
: 현재의 국채 잔고가 약 800억 엔으로 금리가 1%상승하면 이자부담만 8억 엔 증가
→ 즉, 일본의 재정은 항상 금리 리스크를 떠안고 있음.
- 그 외에 사회보장 지출이 32조 엔
: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매년 1조 엔 정도 증가
- 지방 일반경비: 15조 5000억 엔
- 공공사업: 10조 엔에서 6조 엔으로 감소
- 방위비
 - i)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의 자민당의 방침으로 GDP의

1% 이내로 제한

ii) 현재의 GDP 규모가 500조 엔이므로 매년 5조 엔 정도 지출

○ 세입 구조

- 세금 56.6%

- 국채발행 38%

- 세수

i) 소비세 17조 엔

: 소비세율을 5%에서 8%로 인상한 영향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

→ 향후 소비세율을 8%에서 10%로 인상 계획

ii) 소득세 16조 엔

2. 세출입 구조의 변화

○ 세출구조의 변화

- 2008년에 세출을 100조 엔까지 인상

: 리먼 쇼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

- 민주당 집권으로 복지확대

- 동일본대지진 복구예산 필요

○ 세입

- 버블 경제가 정점에 달하던 90년까지는 세입규모가 꾸준하게 증가

: 세수와 세출이 동시에 확대

- 한국은 일본보다 20년 늦게 비슷한 경험을 함

: 일본경제는 한국에게 좋은 참고 대상

예)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노동력 인구 감소시작

한국은 2006년부터 잠재 성장여력 감소 시작.

- 그 후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로 세수가 감소

- 그 이후로는 명목 GDP 자체가 감소하면 세수가 더욱 감소

- 결국 세입과 세출의 Gap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

: 최근 세수가 54조 5000억 엔 규모까지 회복

- 세수 증가 원인
 - i)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회복
 - ii) 소비세 증가
 - : 소비세율을 10%까지 올리면 정점기 수준의 규모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임

○ 국채

- 매년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온 결과 2014년 말 국채 잔고는 807억 엔에 이릅니다
- 다른 국가와의 비교
 - i) 모든 국가들이 리먼 쇼크 이후 재정수입이 악화
 - 재정 건전화에 나섬
 - ii) 그러나 G20 국가 중에 일본은 유달리 재정건전화의 속도가 느림
 - : 그 이유는 국채의 잔고가 높아서 이자지급 규모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
- 일본의 GDP 대비 국채의 비율은 약 200%

3. 사회보장 비용의 문제

○ 1990년과 2015년의 비교

- 매년 평균 1조 엔씩 사회보장비용이 증가
 - : 1995년 세수의 11.6%를 차지하던 사회보장비용이 2015년에는 31.5%까지 상승
- 다른 지출예산은 거의 불변인 가운데 세수가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비용을 국채로 벌충하는 구조
 - 즉 일본의 재정적자의 원인은 사회보장비용

○ 타 국가와의 비교

1) 작은 정부

-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은 정부임

- 참고로 한국은 더 작은 정부

2) 복지지출의 규모

- 2011년 이후 사회복지 규모가 확대되어 비교대상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지출의 규모는 중위권 수준
: 따라서 일본을 저복지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 함.
-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국제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의 비중이 적은 편
- 복지지출 규모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중위권 수준이지만 조세수입은 하위권으로 이로 인하여 재정수지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.
 - i) 한국은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대신 복지 부담도 적은 편
 - ii) 그와는 대조적인 국가가 북유럽국가로 사회복지 수준이 높고 복지부담도 높은 편
 - iii) 복지 재정이 잘 되어 있으면 사회보장지출-국민부담률 그래프의 45도 선 가까이에 위치
: 그러나 일본은 45도 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.
→ 즉 일본은 복지의 수준은 높는데 부담은 적은 구조임.
-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축소와 부담의 증대 어느 쪽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

⇒ 사회보장과 세액의 일체화 개혁이 필요.

3) 사회보장 문제의 가장 큰 원인: 고령화

○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 1차 베이비 붐 시대를 맞음

- 참고로 한국은 6.25 전쟁 직후 베이비 붐 시대를 맞아 일본과는 약 10년의 차이가 있음
: 즉 일본이 고령화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지 10년정도 되어가는 현재 한국도 고령화의 영향이 시작
-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2년~2025년 사이에 75세를 맞이하게 됨.
: 현재는 인구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역삼각구조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문제는 사회보장 규모의 증가

-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이 되면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추가되는 구조를 하고 있음.
 - : 64세 이하까지는 1인당 의료비 국고부담이 25만 엔인 반면, 65~74세는 85만 엔, 75세 이상은 326만엔으로 증가.
- 이는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를 기업부담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그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.
 - : 즉 75세가 넘으면 64세 이전과 비교해서 의료비의 국고부담이 10배로 증가
 - 문제는 2025년이 되면 1차 베이비 붐 세대 전원이 75세를 넘기게 됨.
- 2012년에서 2025년 동안 GDP가 매년 3%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의 GDP는 2012년의 약 1.27배가 됨.
 - :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 연금의 증가는 1.12배에 그쳐 GDP 성장을 따라잡지 못함.
 - 고령화에 따라 연금 급여수준이 하락
-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 수준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비와 요양비 지출 증가 때문
 - : 고령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는 2025년에 각각 2012년의 1.54배와 2.34배로 증가하여 GDP 성장률을 넘을 것으로 보임.

○ 현재 일본은 선진국 중 고령화의 수준이나 속도로 볼 때 가장 고령화된 국가

-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도 더욱 고령화가 진전되는 고령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짐.
- 참고로 한국은 고령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

○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복지비 부담은 낮은 편임.

4. 일본의 재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극복노력

○ 일본의 재정운영에 대한 반성

1) 복지의 도입이 고도 성장기에 결정

- 고도 성장기는 세수도 높고 금리도 높던 시절이라 연금을 도입하면서 급여수준만 정하고 세수부분을 유보
: 급여수준은 고도성장기의 금리인 연 5.5%의 운용수익을 상정하고 결정함
-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연금 운용수익이 하락

2) 불완전한 급여체계

- 세수는 외면한 채 급여수준만 정하다 보니 연금 운용수익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게 됨.
- 결국 세입으로 연금을 채워야 하는데 연금을 채우기 위한 증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가 없어 국채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됨.

⇒ 처음부터 연금급여수준과 세수의 규모를 동시에 정했어야 했다는 반성

○ 재정운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

1) 소비세 인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

- 특히 젊은 세대의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육아비 도입 등 전세대형 복지를 도입
- 소비세 인상으로 얻게 되는 5%의 세입 증가 중에서 1%인 약 2조 8000억 엔을 사회보장에 충당하기로 결정
: 국가로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국채상환에 쓰고 싶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

2) 재정 건전화 방안

- 리먼 쇼크로 전 국가의 재정이 악화
: G20 국가가 각국의 재정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할 것으로 합의

- 그러나 일본은 국채의 제약이 높은 관계로 이자지급과 부채총액을 제외한 primary balance를 반으로 감축하는 유예조치를 받음
 - : 이러한 유예조치의 근거는 primary balance를 균형을 맞추면 명목상 채무 잔액을 GDP 대비 절반으로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
- 그리고 2015년까지 일본은 주어진 재정건전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논의 중.

3) 다른 국가와의 비교

- 독일은 이미 재정흑자를 달성
- 이탈리아는 국채 반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.
- 일본의 경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목표를 향해 확실하게 진전을 보임

○ 재정 건전화 계획의 2가지 시나리오

- Baseline
 - : 성장률이 답보상태를 보여 재정수지도 답보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상정
- 아베노믹스 성공시
 - :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를 상정
- 재무성의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재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고 싶으나 성공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재정적자의 규모가 9조 4000억 엔에 달함
 - : 따라서 세출을 억제하고 세입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.
- 세입 증대 방법 중의 하나가 소비세 인상이나 당장의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세출억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.
 - : 세출의 억제는 사회복지 외의 지출을 억제하는 형태로 나타남.

⇒ 2020년까지 구체적인 정책의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

5. 일본의 자금순환구조와 재정파탄 가능성

○ 일본과 한국의 비교

- 일본은 국채규모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파탄을 겪고 있지 않음

-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경험

○ 일본과 한국의 재정의 기본구조 비교

- 일본과 한국은 경제성장의 과정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경제규모에서는 차이
-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크고 엔화가 국제통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.
 - : 국제통화로서 엔화의 가치가 안정된 점이 파탄을 겪지 않게 된 원인
- 그러나 이러한 면에는 부작용도 있음. 만약 재정 파탄을 겪었으면 일찍이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수도 있으나 재정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
 - : 현재 일본의 채무 총액은 약 8조엔 규모로 금리 1% 상승 시 이자지출만 800억 엔 증가. 이는 세수 총액인 약 10조 엔의 0.8%에 달하는 양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

○ 일본의 자금순환 구조

1) 국채의 지분비율

- 일본이 재정파탄을 겪고 있지 않는 이유는 국채의 해외투자자 비율이 낮아서 해외투자자에 의한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
-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여 국채에서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4분의 1에 달함

2) 향후 국채소화 전망

- 향후 물가 상승률이 2% 수준으로 안정되면 일본은 출구전략을 사용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국채 잔액을 없애기 위하여 국채를 매각할 수도 있음
 - : 그 경우 국채를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2년 안에 직면할 문제
- 일본은행이 매각 혹은 매입하지 않는 국채는 다른 경제주체가 매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가계주택담보 증가로 인하여 가계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고 가계에 의한 흡수는 기대하기가 어려움

- : 가계의 순금융자산 규모는 160조로 증가에 한계가 있음
- 정부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국채의 안정적인 소화가 곤란에 처할 우려가 있음
- 2020년경이 되면 일반정부부채가 가계순금융자산의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채의 매입을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

3) 경상수지와 부문별 자금 과부족 현황

-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은 원유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
 - :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0에 접근
- 가계와 기업의 저축이 감소
 - i) 가계와 기업의 저축이 증가하면 정부가 흡수
 - ii) 과거에는 외국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가계와 기업의 저축이 흡수되었으나 현재 해외자산의 규모는 0에 접근

4) 국채거래에서의 해외투자자의 비중

- 해외투자자의 국채보유 비중은 stock 기준으로 8%
- 국채 현물거래에서 해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.3%, 선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.6%

4월 15일 (수)

I. 일본 정치인과의 대화 (2)

□ 면담자: 누카가 후쿠시로(중의원 의원, 자유민주당)

□ 면담내용

○ 최근의 한-일 관계

1) 한-일 관계의 정체

- 경제는 교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는 정체된 상태
: 2년 가까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
- 감정적인 대립관계를 멈추고 새로운 한-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.
- 한-일 양국은 에너지 등 공통적인 교류과제를 공유

2) 위안부 문제 관련

- 한-일 의원연명 회의 차 한국 방문 시 대통령과 면담
: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, 특히 아베 정권 차원에서 고노 담화의 계승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
-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국장급 회의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고 상호 수뇌부의 의중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함
: 국장급 회의는 내용이 동반되지 않는 회담으로 그치는 것이 실상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됴.
: 그러나 산케이 신문 지국장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
- 일본은 한-일 수교회복 50주년을 맞아서 정상회담을 추진 중

3) 일본의 입장

- 93년 고노 담화를 통하여 총리가 사죄를 하고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결

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함

- 그 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-오부치 총리 간의 회담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를 인정하고 수상이 한국 국회에서 사죄하는 한편 전후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
-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문화 개방 조치를 취하고 일본은 월드컵 공동개최와 경기장 건설비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한-일 관계를 구축

4) 한-일 관계의 경색

-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위안부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오름
: 일본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대 이후로 한국과의 관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.
- 일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음.
: 헌법재판소라는 초월적인 기관이 왜 필요하며 그러한 기관이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과거의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

5) 변화하는 일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

- 많은 일본 방문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일본과 실제로 본 일본과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음
- 일본의 변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.

○ AIIB 문제

- AIIB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자세
: 일본은 AIIB가 국제기준에 대한 협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음
→ 과연 AIIB에 공존공영의 rule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
- 중국 주도권과 관련된 생각
i) 중국은 서남아시아, 필리핀, 베트남 등에 대하여 힘에 의한 상황변화를 기도해 왔음
→ 중국에게는 대국다운 자세가 필요

ii)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아시아,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.

: 그러나 최근에는 현지에서의 권리확보에 주력한다는 냉정한 비판이 대두

→ 이 점이 일본의 공적원조와의 차이

iii) 발전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투명성을 가진 구체적인 형태의 지원이 필요

- 재원의 사용에 대한 입장

i) 일본은 AIIB의 재원의 유용한 사용법에 대한 rule 확립이 중요하다는 입장

ii) 재원의 사용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곤란

○ 전후 regime의 탈피

- 전후 regime이란 무엇인가

: 일본에서는 전후 regime은 전후 승전국에 의한 패전국에 대한 재단이 라는 인식이 강함

- 이는 전후 강화조약에서 패전국 조항에 대한 인식과 연결

II. 한·중·일 경제관계 (Korea-Japan-China Economic Relationship)

□ 면담자: 박상준 (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)

□ 면담내용

1. 한-중-일 협력관계

○ 중국 무역에서의 한-일의 비중

- 수출: 2000년대 초반 20%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초반에는 약 12%로 하락
- 수입: 2000년대 초반 30% 후반대였으나 2010년대 초반에는 20% 초반까지 하락

○ 세 국가의 무역구조: 황금 삼각형(golden triangle)

- 생산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
- 지역 내 수입이 지역 내 수출을 상회
- 황금 삼각형: 2002년~2006년 무렵까지 지속
 - i) 중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
 - ii)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
 - iii)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

○ 황금 삼각형의 사례

- 한국은 기계, 화학, 석유·석탄 산업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
- 반면 기계, 화학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
- 한국 화학산업의 대중 무역 흑자는 대일 무역 적자와 강력한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짐
- 기본적으로 기업은 무역역조에 대한 저항감이 없음
 - i) 한국 화학산업의 경우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한국 또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
 - ii) 황금의 삼각형을 활용하여 한-중 양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가동률

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

⇒ 이렇게 세 국가가 경제적으로 공고히 연계되어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일

○ 한국의 수출 구조

- 중국·일본의 세계 수출이 한국의 대중·대일 수출에 영향을 줌
-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·중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
-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나 중국과 한국은 또한 미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음.

○ 최근 한-중-일 관계의 변화

- 엔화의 평가절하로 대일 수출기업의 수가 줄고 수입기업의 수가 증가
- 일본의 동남아 중시경향 강화
: 일본발 비행노선에서 한국 노선이 축소되는 대신 동남아 노선이 증가
- 그러나 여전히 한·중의 비중이 높음

2. 환율을 둘러싼 논쟁

○ 최근 환율 변화에 대한 논쟁

- 세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민감
- 한국은 일본에게 경기 회복을 위하여 엔화 약세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 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
- 중국은 엔화 약세에 대해서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경고

○ 환율과 수출의 관계

- 많은 연구가 세 국가의 수출이 상호간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임
- 2007년에는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, 이는 한국의 대중무역비중이 증가하는 수출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
: 국가별로 분류하면 여전히 환율에 영향을 받음

3. 한-중-일 3국의 산업구조와 경쟁

○ 주력 수출산업의 유사성

-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한-중-일 3국은 기계류의 수출 비중이 높음
- 유럽 국가의 경우 대미 수출에서 기계류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독일뿐이며 영국·프랑스는 다름
- 그러나 300가지 주요 수출상품 중에서 각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상품이 겹치는 회수를 비교할 때는 유럽이 유사성이 더 높음
: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-중-일 쪽이 환율변동에 더 민감

○ 한-중-일이 환율변동에 더 민감한 이유

- 유럽의 경우 유로와 스텔링 파운드의 움직임이 유사성을 보이거나 한-중-일은 다른 경향을 보임
- 2005년까지는 원과 엔이 동조화경향을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후 동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
 - i) 2008년에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서 2009~2011년 사이에 일본기업이 최악의 기업실적을 보임
 - ii) 2009~2011년 사이에 일본에서는 원유수입 상사만 흑자를 보고 제조업 기업의 실적은 악화
: 반면 한국기업의 실적은 강화
- 그 동안 원화 약세에 대해서 일본은 불만이 없었으나 2013년 무렵에 와서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
: 양적완화의 시작
-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2007~08년의 엔화 강세가 환율과 경제의 기초체력(fundamental)의 괴리(misalignment)를 보이던 시기
: 2015년에도 환율과 경제 기초체력의 괴리가 있었으나 허용범위 내
- 일본은 여타 주요 통화에 비해 양적완화의 시기가 늦음
 - i) 양적완화 정책의 실기
 - ii) 양적완화가 시행된 지금도 그 규모는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낮은 편임

4. 엔화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

○ 엔화 약세의 효과

- 엔화 약세가 일본기업의 수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. 그러나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킴
- 한편 엔화 약세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의 수출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한-중 수출기업의 수익에 타격을 가져옴

○ 환율과 수출가격

- 일본의 수출업체는 엔화가 40%나 평가절하 되는 동안 수출 가격은 20% 밖에 올리지 않음
- 2009~11년 기간 중에 손실을 기록한 일본 기업은 생산과 수출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수익을 올리는데 주력
 - i)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일본 기업은 부채 감소에 주력
 - : 투자 대신 기업저축을 늘림으로써 투자율이 감소
 - ii) 현재의 일본기업의 목표는 가격을 낮춰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것
 - : 영업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높아져도 수출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익률을 높이는 쪽에 주력
 - 환율과 수출단가의 동조성이 해제
 - iii) 과거에는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를 많이 올리지 않고 버텼으나 현재는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를 낮추는 대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려 함

○ 향후 전망

- 2013~14년 기간 중에 이익을 기록한 일본 기업은 투자와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
- 일본의 임금구조는 연령에 따라 베이스 임금이 결정되고 베이스 임금을 토대로 상여가 결정되어 연 수입을 결정
 - : 최근의 실적호조로 베이스 임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투자가 회복세를 보임

→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시련 예상

○ 파나소닉의 사례

- 아베노믹스 이전의 파나소닉은 순매출 감소, 주당 순손실 기록, 투자자 및 주주의 요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음
- 자체 구조조정 및 기업구조 변화에 환율상승 효과가 더해져서 영업이익이 개선
: 아베노믹스 이후 파나소닉은 순매출이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이 (+)로 전환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탈출

5. 민간기업 간의 사업 협력

○ 일본 내 경영환경의 변화

-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본을 떠나는 기업의 수가 증가
: 결과로서 매년 일본 내 20만~35만개의 일자리가 소멸
- 일본을 떠나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및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를 경험
 - i) 일본의 기업문화에 대한 몰이해
 - ii) 일본 기업주의 국수주의⇒ 지역 내 인수·합병을 뒷받침할 조직이 필요

○ 일본 기업의 이전과 한-일 협력체계 강화

- 2011년까지 엔화강세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기업은 한국 등으로 납품처를 변경
- 일본의 자동차 부품·소재 기업의 한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두드러짐
- 이러한 현상은 일본은행의 인식 변화도 가져옴
 - i) 양적 완화로 일본의 은행이 한국 기업에 대출을 타진
 - ii) 한국 대기업에의 납품이 신용의 근거가 됨

○ 자원 개발과 한-일 협력

- 일본의 상사기업은 자원 개발에 주력
- 일본과 한국의 공동 자금출자로 자원개발에 착수

○ 협력관계의 변화

-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2012년까지 계속됨
- 이후 공급 사슬의 붕괴로 2013년 이후로는 일본 기업의 한국이전이 중단

4월 16일 (목)

I. 일본의 에너지 정책(Japanese Energy Policy)

□ 면담자: 유하라 데쓰오 (케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이사)

□ 면담내용

1. 2015년 현재의 에너지 상황에 대한 인식

○ 화석연료는 고갈되어가는 상황으로 보임

-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
- 200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도 고갈되어 갈 것으로 보임
- 가장 확실한 대책은 고속증식으로

○ 지구 환경의 변화

-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에 불과
-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잔존할 수밖에 없음.
: 지구가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각국이 나눠서 감축할 수밖에 없음.

○ 현재 일본에서는 국민의 과반수가 원자력에 반대하는 상황

-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80%가 반대
- 선거를 앞두고 원전 재가동 추진을 주저할 수밖에 없음

○ 원전 재추진의 불가피성

- 하지만 현재의 에너지 사정 하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
- 따라서 원자력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기여도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설명하여 설득할 필요가 있음.

2. 발전 에너지 신정책 포트폴리오

1) 원자력

○ 40년 후 원전 폐쇄

- 원전의 비중을 20%로 감축
- 그러나 표에서 나온 21~22%는 원전을 60년 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내포
: 선거결과를 의식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

○ 원전 정책의 일관성 상실

- 동일본대지진 전 하토야마 총리는 원자력의 비중을 50%까지 늘릴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음.
- 그러나 지진 후에 원전의 비중을 0%로 한다고 발표 했다가 신 발전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20%로 밝히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

2) 재생에너지

- 신정책 포트폴리오에서는 전력 생산의 약 25%의 비중을 차지
: 그 중에서 이미 10%는 수력이 담당
-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열 및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10%
- 생산 기대치가 불안정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비중을 15% 이내로 설정

3) 화석연료

○ 화석연료의 비중

- 약 55%의 비중을 차지
: 그 중에서 석탄 30%, 가스 25%, 석유가 5%를 차지
- 이는 석탄 사용을 늘리고 가스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

○ LNG의 사용 축소의 의도

- LNG는 청정에너지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사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음.
- 현재 일본의 전력생산의 기본은 석탄, 원자력, 수력 발전이 60%를 차지하고 있음.
- 과거의 경우, 환경장관이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석탄의 사용에 반대해 왔음
: 그러나 전력에너지 생산에서 석탄의 비중은 중국이 80%이상, 미국과 독일은 50%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 세계가 석탄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
→ 따라서 석탄 확보가 어려움
- 현재의 일본의 화력발전은 LNG가 중심
 - i) 그러나 계획에 의하면 LNG의 비중은 현재의 43.2%에서 25%로 낮출 계획
 - ii) 남은 LNG 설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LNG 생산 증대 및 LNG 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예정

○ 최근의 상황

- 셰일가스의 대두
 - i)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이 가능한 셰일가스에 비해 냉각을 필요로 하는 LNG가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감.
 - ii) 한국의 경우에는 안보문제와 결부되어 LNG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- LNG는 이란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됨.
 - i) 셰일가스 이전의 천연가스는 이란과 시베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공급을 받을 수 없음
 - ii) LNG의 안정적 확보는 한-일 공통의 문제로 현재까지는 사할린에서 LNG를 공급받고 있음.
- 화학산업이 석유에서 에틸렌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미국의 장악력이 높아짐.
: 독일과 일본은 LNG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화학산업의 기술수준은 높음

⇒ 따라서 어떻게 LNG의 의존도를 줄여서 발전비용을 경감하고 석탄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추구

3. 원자력의 문제

○ 노심 용융과 폐기물 문제

- 노심용융 문제

: 노심이 용융되면 수소가 생성되어 폭발 위험이 있음

- 폐기물 문제

: 현재의 반감 속도에 의하면 유해방사선의 소멸에는 10만년이 소요

→ 이미 고이즈미 정권 시절부터 반대 움직임이 시작

- 원자력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원자력 오페수의 어장 유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임

○ 일본의 원자력 역사

- 일본은 원자로의 개발, 연료 재처리 등을 금지

: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 수밖에 없음

- 그 결과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

: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그러한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함

○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기본 계획

- 노심용융 사고의 회피

- 고수준 폐기물을 저수준 폐기물로 전환

⇒ 이상 2가지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정책의 기본적 계획

4. 일본의 에너지 공급구성 예측

○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와 IEA의 2030년 예측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임.

- 일본의 에너지 유효 사용률: 33%

- 에너지 절약 체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일본조차 에너지의 3분

의 2는 버려지고 있음.

: 에너지의 유효사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과제

⇒ 결국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

○ 에너지 소비에서의 주된 소모처

- 1위: 자동차

i) 소비하는 에너지의 82%가 버려짐

ii) 에너지 절약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 등으로 버려지는 에너지의 비중을 줄여도 한계가 있음

⇒ 대책이 필요

- 2위: 산업

i) 석탄과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

: 가스를 사용하여 열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

ii) 천연가스는 수소로 전환하여 직접 활용하도록 함

iii) 농업에서는 한-일 모두 중유를 사용하여 하우스 농업을 경영

- 3위: 가정

태양광 등으로 자립발전이 가능 →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.

⇒ 모든 에너지 정책에는 공업, 농업, 교통 정책 등이 결부되어 있음.

○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의 예측이 엇갈림.

- IEA World Energy Outlook에서는 태양광의 비중을 높게 예측한 반면

-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는 지열과 바이오매스를 강조

: 이는 외부 압력의 영향으로 인함.

5. 한국과의 관계

○ 에너지 및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 간의 대화는 거의 없음.

○ 오히려 석탄사용에 대한 오염문제까지 포함해서 중국과의 대화가 더 진전을 보임

II. 아지노모토의 세계 전략(Ajinomoto' s Global Strategy)

□ 면담자

- 다카하시 겐자부로 (아지노모토 이사, 홍보부장)
- 가네코 게이지 (아지노모토 식품사업본부 해외식품부 해외감칠맛조미료그룹 장)

□ 면담내용

1. 아지노모토의 현황

○ 아지노모토의 역사

- 1908년 감칠맛 발견 → 조미료화
1909년 제품화
1917년 뉴욕 사무소 설립으로 해외사업을 시작
2003 한국지사 설립
2014년 파키스탄 사업 검토 중
- 2014년~16년간 소비자 사업 3개년 계획 실시 중
: 2015년으로 2년째를 맞음

○ 아지노모토의 해외진출 현황

1) 현재 26개국에서 사업 전개 중

: 해외 사업의 기본은 크게 식품부문과 생명과학 및 정밀화학(bio science & fine chemicals)로 나뉨.

2) 해외사업 진출 시 진출국의 인구규모를 고려

- 이른바 인구 1억 이상의 1억 인구 클럽을 최우선 진출 목표로 설정
: 인구 1억 이상 국가는 파키스탄을 끝으로 진출 완료
- 인구 1억 미만 국가에도 다수 진출 해 있음.

○ 아지노모토의 영업현황

1) 매출과 영업이익

- 매출이 2003년 678억 엔에서 2013년 2418억 엔으로 3.5배 증가.
- 같은 기간 영업 이익은 6배 증가

2) 매출 구성

- 제품별 매출 구성
 - i) 아지노모토 조미료 39%: 연 5%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
 - ii) 기타 조미료 35%; 인도네시아, 브라질, 베트남 등지에서 두자릿수 %의 증가율
 - iii) 즉석면: 매년 두자릿수 %의 증가율 기록
 - iv) 음료 및 가루음료: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 - 지역별 매출 구성
 - 아시아 77%
 - 남미 15%
 - 유럽 7%
 - 북미 1%
- ⇒ 아시아가 해외 이익의 중요원천
- 주요국 소비자 식품 매출 성장률
 - 태국 20%
 - 브라질 22%
 - 베트남, 인도네시아 두자릿수 %

2. 그룹 중기전략: FIT & GROW with Speciality

○ FIT & GROW

- FIT: 구조개혁(structural reform)
- GROW: 특히 해외 부문의 성장을 중요시

○ 해외매출 목표

- 단기 목표 900억 ~ 1000억 엔
- 2020년 이후 1500억 엔이 목표
- 이러한 목표의 성취를 통해서 세계 top 10 Genuine Global Food Company를 목표로 함

3. 3개년 계획의 해외 소비자 사업

○ 해외 소비자 사업의 목표: 소비자, 지역사회, 지구환경에 공헌하는 Genuine Global Food Company

- 소비자에의 공헌: 맛과 건강을 통한 행복추구
- 지역사회에의 공헌: 현지생산, 현지고용
- 지구환경에의 공헌: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

⇒ 과영양, 지역실업률 해소, 식량자원 부족,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식품을 통해서 해결

○ 구체적인 실천방안

- 소비자: 맛, affordability, 안정성 추구
- 지역사회: 현지원료 사용, 현지에서 생산, 현지인 고용
- 환경보전: 지속가능성에 초점
 - i) 재고, 폐기, 반품의 절감을 통해 낭비를 축소
 - ii)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생산 활동

○ 해외 소비자식품 사업규모

- 2016년까지 2010년(?) 매출의 2배, 2020년까지 2.5배를 목표로 함.
- 그러나 현재 추세로는 목표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확장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함.

4. 아지노모토의 성장전략

○ 성장전략의 개요

- R&D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
-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성장
- 기존시장의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
- Open New Sky: 제휴, M&A, joint venture 등

○ R&D 활용

-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
→ 기존 사업 확대 및 새 사업에의 착수
 - 기존의 사업전개 모델
: 아지노모토 제품 소개 → 풍미조미료 소개 → 요리용 조미료 소개 →
즉석 식품 순으로 시장을 공략
 - 3개년 계획에서의 새로운 사업전개 모델은 시장 진출 시기부터 해당 시
장에 맞춘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
- ⇒ 기존의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병행 추진.

○ 해외진출의 기본 전략

1) 현지 식문화에 대한 이해

: 설문조사, 가정방문, 인터뷰 등을 동원

2) 상품 개발

- 현지적응을 위하여 현지 인력을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개발된 상품
이 현지에서 점유율 1, 2위를 다룰수 있게 함
- 감당가능한 가격(affordability)
: 같은 제품도 국가별로 용량을 조절하여 각국의 식문화에 맞게 필요
한 분량만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
- 활용성(applicability)

: TV광고, 조리실습, SNS, 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어디에서도 아지노모토의 제품을 인식시킴

- 현지형 brand 명

: 현지에서 개발되는 제품은 현지인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함.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른 brand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 심볼인 ACoS(Ajinomoto Community Symbol)을 도입하여 모든 제품에 부착하도록 함. 즉 ACoS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을 통하여 현지 브랜드를 support하고 현지 브랜드는 현지 및 세계시장에서의 아지노모토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공헌.

3) 판촉 활동

- 직판 시스템

- i) 세일즈 네트워크를 직접관리
- ii) 현금거래, 직접판매를 원칙으로 함.

- 영업 기본활동

- i) Outlet: 취급 점포 수 증대
- ii) 제품 Size의 다양화
- iii) 전시: 소비자 눈에 띄고 접하기 쉬운 곳

⇒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전개

- 이러한 판촉활동의 결과 원주민 지역에도 침투하여 아지노모토가 물물교환의 수단으로까지 자리매김.

○ M&A 활동

- 터키

- i) 현지식초회사 50% 지분 획득
- ii) 배급 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전개를 가속화한 결과 인수 5년 만에 매출 50억 엔을 달성

- 미국

- i) Windsor Quality 매수, 2013 매출 700억엔 달성
- ii) 2020년까지 미국 내 아시아계 냉동식품 매출 1000억 엔을 목표로 함

5. 아지노모토 그룹의 기본 이념(Group Principle)

- 1) 새로운 가치창조(Create new value)
- 2) 개척자 정신(Pioneer spirit)
- 3) 사회공헌(Social contribution)

III. 일본의 사회(Japanese Society)

□ 면담자: 고지마 가쓰히사(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국제관계부 제2실장)

□ 면담내용

1. 일본의 인구구조

○ 인구구조의 특징

- 일본의 인구구조의 특징은 고령화 후 저출산
- 기존의 인구구조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전제는 조금씩이라도 인구는 증가 : 현실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고 이민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
- 2060년에는 인구의 60%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보임

○ 고령자의 분할

- 만 65세 ~ 74세까지를 초기 고령자, 만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
- 2010년까지는 초기 고령자의 수가 후기 고령자의 수를 웃돌았으나 그 이후는 후기 고령자의 수가 초기 고령자의 수를 초과하기 시작.
- 후기 고령자는 고령자 중에서도 더 나이가 많은 계층으로 요양수요도 그만큼 증대
-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사망시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

○ 출생은 감소

- 현재는 1년에 사이타마현 도쿄로자와시 규모의 인구가 소멸 중
- 앞으로는 1년에 광역시 1개 규모의 인구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

2. 가족형태

○ 가족형태의 변화

- 1995년까지 부부 + 미혼 자녀의 표준적 형태가 대세
- 그러나 그 후 미혼자녀의 독립과 노부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경향
-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인구 증가.

⇒ 2013년까지 일본 가구의 3분의 1이 1인가구화할 것으로 보임.

○ 부부 혹은 독거노인 증가

- 1985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의 비율이 70%였으나 2013년에는 40%로 하락
- 고독사, 보이스포싱 문제 증가

3. 지역간 차이

○ 광역자치체

- 수도권외의 경우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음.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전망
- 지방의 경우 고령자의 비중이 높음
- 도시부의 고령자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

⇒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

○ 기초자치체

- 2040년에는 95%의 기초자치체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- 수도권, 지방도시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
- 2040년까지 지자체별 고령자 수가 증가할 전망
: 한계지자체(고령자의 비율이 50%가 넘는 지자체)의 출현
- 고령화가 진전되어 젊은 세대, 특히 가임기 여성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 인구가 추가되지 않아 소멸할 위기 ⇒ 소멸 지자체 출현 우려
예) 도쿄도 도시마구: 유동인구는 많으나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인구는 감소경향에 있음.

4. 경제

○ GDP

- 1995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4~5조 달러 사이에서 정체
- 2010년에 1995년 수준을 회복
- 1인당 GDP도 1995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3만~4만 달러 사이를 오고 가다가 2010년에 1995년 수준 회복

○ 산업구조

-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남
- 서비스업 안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고 피고용인이 늘어남
- 서비스업 피고용인 증가의 이면에는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가 있음
: 2012년에는 취업자의 30%가 비정규직

○ 가계의 변화

- 1인당 소비지출에서 교통 통신비의 지출이 증가
- 임금정체의 영향으로 나머지 지출은 정체
- 1995년 이후 임금 수준의 변동은 없으나 그 이면에는 임금삭감, 실업, 취업포기 현상이 있음
: 실업자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취업포기자 수가 증가.

5. 양극화 사회

○ 소득격차

1) 일본의 소득구조

- 90년대까지의 일본은 소득이 평등하게 배분되어 격차나 불평등이 없었던 사회임
- 90년대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

⇒ 대책논의 필요

2) Gini계수

- 전체적인 Gini계수는 감소했지만 고령자의 소득격차는 증가
- 연금이나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제외하면 Gini계수는 증가

3) 빈곤율의 증가경향

- 빈곤이 증가하면 교육기회가 축소되고 자립 가능성이 줄어들
- 빈곤의 대물림화 우려

○ 그 외의 격차

- 건강: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에 차이
- 취업: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에 차이. 임금 수준 정체와 결합되어 정규직 전환 비율을 낮춤
- 결혼: 출신 학교, 다니는 직장에 따라 만남의 기회 변화
- 자산
- 교육: 부모의 사회적 지위·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 차이
- 정보: ICT 기기 활용에서의 격차

← 이 모든 격차는 소득 수준의 격차가 배경으로 작용

6. 사회보장

○ 일본의 사회보장제도

1) 사회보험

-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
- 비용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에서 충당
- 사회보험의 종류

- i) 건강보험과 연금: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
- ii) 실업보험
- iii) 노동재해보험
- iv) 요양보험: 4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함

2) 사회복지

-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, 사별독신 등
-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음
- 혜택은 세금으로 부터 현물 혹은 현금의 형태로 지급
-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

3) 공적 부조

- 저소득자 생활보험
- 실제 수입조사를 동반

4) 그 외에 공중보건, 주택 제공 등이 있음

○ 사회보장에서 각 주체의 역할

- 정부: 정책 입안 및 운영
- 지방자치단체: 서비스 제공 및 운영
- 민간 사업자
 - i) 서비스 제공
 - ii) 요양, 건강보험의 경우는 민간 사업자의 역할이 큼

○ 사회보장비 증가

- 2011년 사회보장 지출액은 107조 5000억 엔에 달함
- 2011년 사회보장 수입 115조 7000억 엔 중에서
 - i) 보험료 납부: 60조 1000억 엔(가입자 31억 1000억 엔, 고용자 29조 엔)
 - ii) 세수: 43조 5000억 엔(국세 31조 5000억엔, 지방세 12조엔)
 - iii) 기타: 10조 4000억 엔

- 일본은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이 22.58%로 유럽 국가들보다는 적지만 미국, 한국 보다는 높은 수준
- 사회 보장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보험료, 연금,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대의 수가 감소

○ 사회보장의 당면과제

1) 건강보험

- 건강보험 비용 상승 억제
- 의료보험 역할 분담

2) 연금

- 현 체제의 지속가능성: 기여와 수급의 균형
- 한 체제로의 통합
- 배우자 연금 문제

3) 장기 요양보험

- 요양보험 비용 상승 억제
- 요양 종사자 근로조건과 질적 요인의 양립이 과제
- 통합된 지역사회 요양 체제의 구축
: 고령자가 사는 지역에서의 건강보험, 장기 요양보험, 기타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

4) 공적부조

- 공적 부조 대상자 수의 증가
: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없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중에서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
- 경제적 독립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독려

7. 일본사회의 변화와 당면과제

○ 변화

- 인구와 가정
 - i) 21세기 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ii) 가구의 규모는 작아지고 고령자들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
- 지역
 - i) 도시 지역에서의 고령화의 가속
 - ii) 대부분의 지자체에서의 인구의 감소
- 경제: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달성하기 어려움
- 불평등: 소득, 부, 건강, 고용 등에서의 불평등 심화

○ 당면과제

- 고령화, 출산률 저하, 인구감소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처 필요
- 경제정책: 경쟁력 강화와 가구의 구매력 유지
- 사회정책: 불평등, 빈곤, 사회보장(지속 가능성, 맞춤형 복지 등)

4월 17일 (금)

I. 한-일 관계(Korea-Japan Relationship)

□ 면담자: 다나카 히토시 (일본 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)

□ 면담내용

1. 한-일 관계에 대한 인식

○ 한국은 일본의 외교에 매우 중요함

- 민주국가로서 이해관계를 공유
- 그러나 과거문제와 재일 한국인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됨
- 역사 문제 등이 있지만 외교관계는 외교관계로서 진전시켜야 함.
: 양 쪽 국민들에게 그러한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

○ 한-일 관계에서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역할

1)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역할

- 서울 올림픽은 한국이 선진 민주국가의 일원임을 증명한 기회
- 1964년 올림픽을 발전의 계기로 삼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조

2) 2002년 한-일 월드컵의 역할

- 국민간 교류 심화 기회
: 셔틀 항공편 운행, 무비자 입국 실시
- 한-일 문화교류 활성화 → 한류 붐으로 연결

⇒ 한-일 관계는 선진 민주국가끼리의 관계로서 기반이 확고

○ 향후 과제: 한-일 FTA 체결

-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-일 교류확대의 완성판
- 그러나 비전상태에서 답보 중

○ 한-일 관계 정체 의 원인

- 현재의 한일 관계는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
-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
: 이들 문제가 현재의 한-일 관계 정체의 모든 원인은 아님
-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수상이 되든 한-일 공통이익은 항상 존재
: 따라서 문제의 존재에도 한-일 관계는 항상 추진해야함.

○ 한-일 관계 경색 해결방안

1) 한-일간 갈등의 증폭

- 원인: 한국의 성장
- 과거 일본은 한국에게 필요한 존재
- 현재는 안보 분야에서는 각각 미국과의 안보강화를 독자적으로 추진, 경제적으로는 한-중 관계가 진전되면서 중국의존도가 높아짐.

⇒ 일본의 존재감이 줄어들면서 한-일 관계의 가치가 축소됨

2) 국민감정의 문제

- 최근 일본에서는 한-일간 관계개선이나 감정적인 대립의 개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
→ 냉담화
- 한국은 언제든지 일본을 비난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
: 여기에 정치인들의 내셔널리즘(nationalism) 자극이 더해져 상황이 악화됨

⇒ 한-일 관계 경색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

3)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수립

- 경제적으로는 한-일이 협력강화를 통하여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야 함.
- 한국과 일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
 - : 한국의 은행이 한국의 해외사업 진출 용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초대형 은행에 의존
 - 일본의 초대형 은행이 한국 제조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됨.
-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의 rule을 세워야 함
 - : 아시아-태평양 지역 경제의 rule을 주도하는 것이 중국이 아니라 한-일-호주 등이 되어야함.

→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-일은 공통의 이익이 존재

2. 북한과의 관계

○ 2000년대 이후의 북한과의 관계

- 2002년 이후로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
 - : 당시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통하여 각 성·청이 의견을 모으고 김정일이 최종 결정하는 체제
- 현재는 인사도 자주 바뀌고 권력주체도 자주 바뀌는 불안정한 체제

○ 대북 관계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

- 과거에는 일본의 민간기업이 북한과의 관계에 일정 역할을 수행
- 현재로서는 일본의 민간기업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은 적어 보임.

○ 북한과 한-일 관계

- 북한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
 -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가 필요
-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기 때문에 한-일 협력을 촉구하고 한-일 관

계 개선의 중재역할을 자원

- 대북 문제는 한-일이 협력해야하는 문제

○ 한국의 통일

- 한국의 통일은 북한이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에 흡수통일 될 가능성이 높음
 -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
-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이 필요
 - :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 미국과 일본 밖에 없음
 -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함
- 향후 한-일 관계는 기회의 현실화를 위 해 정부와 식자층의 노력이 필요

○ 2002년과 현재의 중국의 태도변화와 북한

- 2000년대에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식
 - : 북한이 중국의 대미관계에서의 완충재 역할
- 현재는 중국이 위상이 상승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
 - : 새로운 대미, 대북관계를 추구
- 북한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일으켰을 때 중국이 말려들 가능성을 우려
 - : 북 지도부가 통제능력을 상실해도 개입할 생각은 없음
- 그러나 북의 핵무기는 우려. 단 북의 핵무기를 한-미가 통제하는 데는 반대
-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뚜렷한 입장은 없음
 - : 표면적으로는 반대는 하지만 묵인할 것으로 보임

3. 중-일 관계의 변화

○ 중-일 관계의 변화

- 한-일 관계는 상호 감정적인 반면 중-일 관계는 상호 전략적.
- 2020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3배, 국방비는 일본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임

-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점이 문제
 - 일본으로서는 억지력 생성에 주력
- 2000년대까지는 일본이 중국에 필요한 나라 → 2010년 이후 중국의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중요성 하락
- 중국의 대일관계의 기저에는 미-중 관계가 있음.

○ 중국의 현재 전략

- 중국의 힘 과시
 - i) 축적한 외화를 전세계에 살포
 - ii) 대외관계의 중점을 중앙아시아, 중동 지역에 두고 유럽, 미국과의 충돌을 피함 → 미국과 대극을 이루고 리더십을 확보
- 즉, 현재의 일련의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. 따라서 중-일 관계도 미-중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로 전환
- 중-일 관계는 평상시로 회귀
 - i) 중국의 성장률 하락
 - ii) 지역 개발 문제
 - : 리먼 쇼크 이후로 지방의 수요확대에 의존해왔으나 지방재정이 악화됨으로써 지역 개발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게 됨
 - 지역 개발이 일본의 자본이 필요해짐으로써 관계가 개선.